

경인·경의·중앙·경원·경춘·경부선, 지하철·GTX 등 도심구간 철도지하화 추진 이개호정책의장 “국가재정법도 경제성 외 균형발전 중요. 행복추구권 보장해야” 정부의 공약, 국정과제 이행부진 및 경제성 주장에 일침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와 서울광역시당, 인천광역시당, 경기도당이 1월 18일(목) 국회의원회관 306호에서 공동주최한 ‘철도지하화토론회’에서 이개호 정책위 의장은 “경인선, 경의·중앙·경원·경춘선, 경부선 등 철도와 지하철 1~9호선, GTX 등 도심구간 철도지하화는 경제성만 논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행복추구권, 환경권보장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개호 의장은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 특별법이 지난 9일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정부는 더이상 경제성을 이유로 철도 지하화를 지체해서는 안된다.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지하화 노선 선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회에서 오송천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장은 “종합계획은 국토부가, 기본계획은 지자체가 수립하고, 상부 개발계획은 개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수립토록 역할이 구분돼 있다.”며 “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철도부지 및 인접지역 개발을 통해 얻는 수익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특별법 취지를 설명했다.

김재복 태조엔지니어링 미래전략실장은 “철도지하화는 대대적인 도시공간의 재구성이 요구되는 지역에서 예측되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추진 방안을 마련한 후 시행되어야 한다”며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사업모델의 개발이익 및 공공환원체계분석과 사업재원조달방안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동선 대진대학교수는 “노선별 기본계획 수립시 국토부 주관으로 역무시설, 연계·환승시설, 급행화를 위한 지상여유부지, 대피선 등에 대한 기술검토가 필요하며, 지상부지 통합개발사업은 유형, 방식, 사업주체 등에 대한 검토를 광역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지하화사업에 연계해서 상부지개발 규모나 시기가 조화를 이루고, 주변지역 개발은 철도지하화 이후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것”을 지적하였다.

김정현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은 “모든 철도, 고속도로지하화에서 상부부지 매각수입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현행 국유재산법 등

관련법에서 도로 및 철도부지의 용도가 해제되어도 일반 재산화 이전에는 매각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추가적인 법적 검토와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고 밝혔다.

박효기 보원엔지니어링 부사장은 “기존 철도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의 편익 추정방법은 신설 철도건설 또는 개량(속도향상), 선로용량 증대에 대한 편익을 추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도시를 단절하고 통과하는 철도시설을 지하화하는 사업은 일반적인 철도사업과 달리 편익이 추정돼야한다” 며 “향후 철도지하화사업의 경제적 가치를 나타내기 위한 편익항목을 통일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구분	노선명	구 간	연 장(km)	추정사업비(조원)	비 고
①	경부선	서울~군포~당정	32	18.8	
②	경원선	청량리~도봉산	13.5	5.9	
③	경의선	서울~수색	5.4	3.0	추가
④	경의중앙선 (경춘선 별도)	용산~청량리~양원역 (망우역-신내역 추가)	12.8(6.3km) (2km)	4.2 (별도 추가)	추정
⑤	경인선	서울 구로~인천	27	8.0	6~8
⑥	경부선(부산)	부산구포~가야차량기지	10.7	4.4	
⑦	경부선(대전)	대전	13	10.2	
	호남선(대전)		11		
⑧	경부선(대구)	서대구역~동대구역	14.6	8.07	
⑨	광주선	광주역~송정역	14.0	1.4	추가
	소계	10개 노선	162.3	63.97(별도추가)	

김우철 민주당 국토교통 수석전문위원은 “정부가 예타의 경제성을 고집하지만 국가재정법에도 균형발전이 중요한 기준” 이라며 수도권-지방간, 지역내 균형발전 차원에서 철도 지하화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경부선 대구구간을 예로 들며, “14.6km 지하화에 드는 사업비는 8조 700억원 상당이지만 양분 도심지역 연결, 3대 역세권(서대구역 대구역 동대구역) 복합개발에 따른 지역경제활성화효과는 13조원이상으로 분석되고 있다” 며 새로운 비용편익분석 필요성을 지적했다.

민주당의 철도지하화 토론회는 철도지하화특별법 제정 직후에 열린 만큼 지역민의 지하화 요구를 반영하여 김영호서울시당위원장, 김교홍인천시당위원장 등이 축사를 하였고,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건설엔지니어링 업계 등 각계에서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2024. 01. 18.

